

아베 식 기업지원 정책의 문제

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해 고용창출을 중시하는 북유럽의 모델, 기업이 스스로 변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 제공, 창업환경의 조성 등은 우리나라도 산업·기업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

□ 일본모델과 북유럽모델의 비교

- 아베노믹스가 친 기업정책이라는 평가에 대해, 한편에서는 경영 실적이 부진한 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지원의 색채가 농후하다고 비판
 - 이와 관련하여, 스웨덴의 자동차기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쌓았으나 현재는 중국기업에 넘어간 샤브와 볼보의 예를 들고 있음
 - 샤브와 볼보 모두 파산 상태에서 스웨덴 정부가 구제책을 실시하지 않은 대신, 고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이전하는 사회적 안전망(safety net)을 정교하게 구축하는 등, 외국기업에 의한 고용 창출을 적극 활용
 - 이른바 스웨덴류의 북유럽모델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주로 하는 고용창출정책과 직업훈련을 포함한 재취업에 대한 지원이 잘 짜여 있음
- 이와 반대로 일본정부의 긴급경제대책은 공공사업 중심임
 - 그러나 재정난 때문에 오래 지속될 수 없는데다, 농업이나 간병 사업 분야로의 전환 등과 같은 건설업계의 개혁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임

□ 아베 식 지원정책의 문제점

- 최근 일본은행법 개정을 기점으로 한 금융완화는 엔저·고주가를 가져왔음
 - 그러나 하마다 예일대 교수가 “일본정부가 재정적자 해소를 목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도할 우려도 있다”고 말한 바와 같이, 일본 정부의 움직임 여하에 따라서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지적
- 주목되는 성장전략에는 많은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기존기업을 지켜주기 위해 정부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 줄 수밖에 없다는 비판임
 - 예를 들면, 중소기업에 자본성 자금을 공급하는 공적금융이나, 기업의 해외사업을 지원하는 민관기관 설립, 나아가 기업으로부터 설비를 매입하여 임대해주는 기금 설립도 검토 중임
 - 이런 조치들이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전자업계에 대한 지원책으로 일환으로 보여 질 수 있다는 것
- 정부가 관여하는 기업지원은 경영개선이 불가능한 기업을 온존시키거나, 지원 대상 기업을 두둔하게 될지도 모르는 폐해가 많기 때문임
 - 고베대학의 교수는 “경영파탄 상태에 빠진 일본항공(JAL)은 기업 재생지원기구하에서 재상장 되었으나, JAL에게 우대책이 실시되는 바람에, 리스크를 무릅쓰고 신규 진입한 항공회사들이 비약할 기회를 상실했다고” 지적
- 네덜란드에서는 한 때 곤경에 처한 대형 전기업체 필립스가 반도체나 TV사업에서 철수하고, 의료기기 등에 집중

- 매각한 반도체 사업은 미국의 기업재생펀드로 부활하여 매출액이 세계 16위로 부상
- 기업이 자기변혁을 통해서 적응해 나가는 것이 자본주의 강점임
- 그러나 일본의 경우, 가전분야의 에코 포인트 제도나 에코 카 감세 등 기업지원정책이 기업 스스로의 경영개혁을 늦추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

□ 긴요한 것은 창업환경 조성과 기업의 변혁유인 제공

- 국가가 개입하여 기존 기업을 지켜주는 정책 대신, 국가의 개입을 최대한 억제, 경영개혁이나 신사업, 신기술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중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
- 국가가 우선해야 하는 일은 규제완화로 수술지원용 로봇「다빈치」가 일부 보험 적용대상이 되어 보급되고 있는데, 이것을 개발한 미국 인튜이티브 서지컬사는 창업 18년 된 젊은 기업임
- 로봇은 일본에서도 만들 수 있으나, 의료기기는 약사법으로 의약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과도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음(일본의료기기산업연합회)
- * 일본정부가 약사법을 개정하겠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
- 정부조달제도 역시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정보통신 시스템의 발주는 NEC 등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음
- 민간연구소에서 대기업과 성장성이 높은 벤처기업이 공동으로 수주토록 하면 소위 오픈 이노베이션*이 촉진되어 일본의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제안
- * 오픈이노베이션(open innovation) : 대기업의 자본주의 방식이 아닌 타사의 기술도 활용한 기술혁신

- 세계은행에 의하면 창업하기 쉬운 환경은 185개국 중 일본은 114위로 매우 낮으며, 사업규제와 과세 등에 개선 여지가 있다는 것
-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업은 경영자의 역량도 문제시되고 있음
 - 미국의 경영학자인 짐 콜린스는 “위기에 직면해서도 2류 인재를 한가롭게 계속 안고 있다” 고 하면서 일본기업들을 신랄하게 비판
- 결론적으로 일본기업들은 현재 자기변혁이 절실하나, 이 상태로 관찮다는 아베식의 기업중시가 문제라는 지적

□ 시사점

- 민주당 정권이 추진했던 에코 포인트나 에코 카 감세정책, 아베 정권에서 추진코자 하는 공공사업이나 아베노믹스에 입각한 기업 지원책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
- 산업·기업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경영개선이 불가능한 기업을 온존시키거나 지원 대상 기업을 두둔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업에게 너그러운 정책이 아닌 친 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
- 사회적 안전망 구축 위주의 고용창출을 중시하는 북유럽모델, 기업으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변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 제공, 창업환경 조성 등은 일본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산업·기업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임

<참고자료>

日本經濟新聞(2013.1.21)